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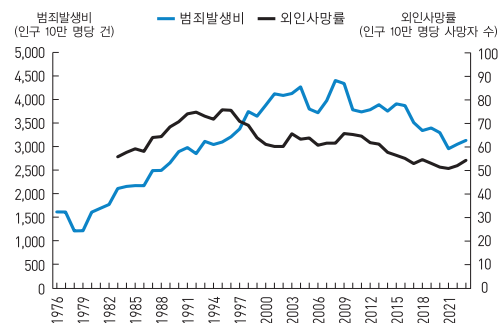
해방 후 ~ 1970년대	1980년대 ~ 1990년대	2000년대 ~ 현재
화재 발생 증가 태풍과 호우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범죄 및 외인 사망 급증 화재발생 지속 증가	범죄 및 주요 안전사고의 전반적 감소 사망자 감소

[시대별 주요 특징]

- (해방 후~1970년대) 자연재해는 주로 대규모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1959년 태풍 사라, 1969년 대홍수, 1972년 베티로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 화재 발생 건수는 해방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48년부터 30년여 연간 약 3배 증가하였다.
- (1980년대~1990년대) 교통사고 건수가 1978~1999년에 약 2.9배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등 특별법범죄가 증가하여 1976~1999년 범죄 발생 건수가 약 2.3배 늘어났다. 이 시기 외인 사망률의 주요 외인 역시 운수사고로, 1983년 이후 약 30% 증가하여 1995년에 최고점을 기록했다. 화재 발생 건수는 1987년에 1만 건을 돌파한 후 증가 추이를 이어갔으나, 사망자 수는 1997년 이후 감소했다.
- (2000년대~현재) 교통사고 등 특별법범죄가 줄어 2009년부터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2년 이후 형법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외인 사망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주요 외인은 자살이었다. 자연재해 대비 강화로 2000년대 이후 태풍 등 인명피해 규모가 10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재산피해액도 감소했다. 2007년 국가화재분류체계가 개편되면서 화재 발생 건수가 늘었으나, 2020년부터 3만 건대로 감소하였고, 부상자 수는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는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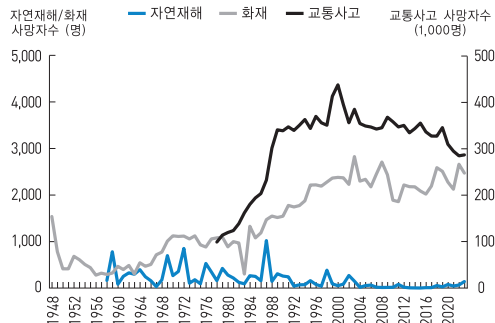
[주요 지표]

범죄 발생비 및 외인 사망률 추이



주: 출처, 정의 등은 본문을 참고하기 바람.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의 사상자 수 추이





안전은 사회적 안전과 자연재난, 인적 사고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범죄와 테러, 자살 등이 있다. 자연재난은 지진, 산사태, 황사, 태풍, 호우, 폭설, 감염병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인적 사고는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시설물, 설비, 기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간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사고, 화학물질이나 에너지에 의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안전 영역에서는 범죄 발생 현황과 범죄 피해를 중심으로 다루었고, 자연재난 영역에서는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인적 사고 영역에서는 사고로 인한 사망, 화재, 교통사고를 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지표인 경찰력과 소방력의 변화를 분석하고, 일반 국민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

범죄(사회적 안전)

범죄 발생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이 범죄 발생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 발표한 것은 1976년부터이다. 지난 48년간 범죄 발생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특히 1976년부터 33년간은 일부 소폭의 증감현상이 나타나기는 하나 대체로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다행히 2009년부터는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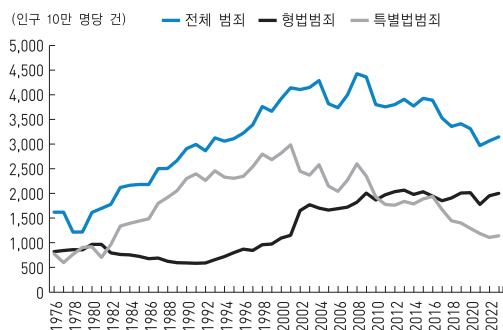
범죄 발생 건수는 인구 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범죄 발생비, 즉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로 발생 추이를 비교한다. 1976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621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2년 후인 1978년에 1,217건까지 감소하여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공식 범죄 통계가 집계된 48년 역사상 최고치인 인구 10만 명당 4,420건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2009년부터는 범죄 발생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3년 범죄 발생비는 3,144건으로, 1976년 1,621건 대비 1.9배 증가했다.

범죄는 형법범죄(살인, 강도, 폭행, 강간, 방화, 절도, 사기, 배임, 위조 등)와 특별법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성된다. 1976~1981년에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 수준이 유사하였으나, 특별법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983년부터 두 유형 간의 발생비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976년에 형법범죄 발생비와 특별법범죄 발생비는 각각 인구 10만 명당 824건과 780건이었으나, 2001년에는 각각 1,153건과 2,983건으로 특별법범죄가 형법범죄보다 약 2.6배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2002년부

터 특별법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형법범죄는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1년 형법범죄 발생비가 특별법범죄를 넘어섰다. 2023년의 경우 형법범죄는 인구 10만 명당 2,001건 발생한 반면, 특별법범죄는 1,144건으로 형법범죄가 특별법범죄보다 1.7배 많다. 공식 범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6년과 2023년을 단순 비교하면, 전체 범죄 발생비는 94.0%, 특별법범죄 발생비는 46.6% 증가한 반면, 형법범죄 발생비는 142.9%나 증가했다.

1976~2001년 26년간의 전체 범죄 발생비 증가와 2002년 이후 22년간의 전체 범죄 발생비 감소를 이끈 원동력은 교통범죄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범죄의 증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2002년 이후에는 특별법범죄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범죄가 증가하면서 전체범죄의 감소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형법범죄 억제 및 예방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그림 X-1).

[그림 X-1] 형법 및 특별법 범죄 발생비, 1976~2023



주: 1) 발생비=해당 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100,000.

2) 발생비는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수치를 따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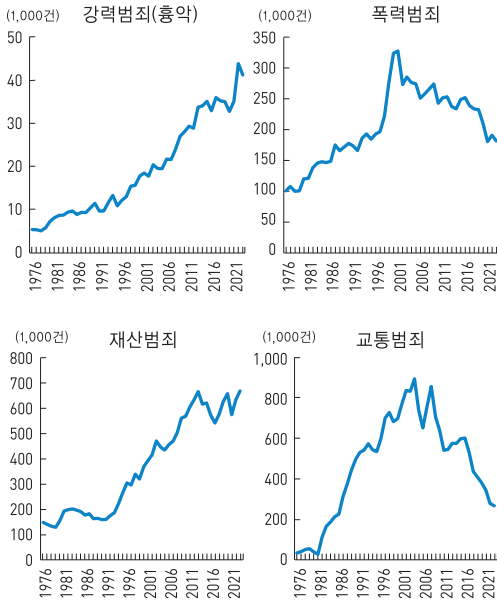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 발생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지난 48년간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폭력범죄와 교통범죄는 일정 기간 크게 증가하였다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공식 범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6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23년 현재 모든 유형의 범죄가 증가한 셈이다.

강력범죄는 1976년 5,341건에서 2023년 41,287건으로 48년간 무려 673.0% 증가했는데, 다른 범죄유형과 비교하여도 가장 뚜렷한 증가 추세라 할 수 있다. 48년간 강력범죄 발생 건수 최고치는 2022년으로 43,927건이다. 재산범죄는 1976년에 147,253건 발생했으나 2023년에는 최고치인 669,303건이 발생하여 48년간 354.5% 증가하였다. 재산범죄는 1976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그 이후 소폭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같은 기간에 전체 형법범죄 발생비가 142.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증가율은 매우 높아서 이 두 유형이 전체 형법범죄 증가를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폭력범죄는 1976년 100,738건에서 2023년 182,621건으로 48년간 81.3% 증가했다. 최고치는 2001년 327,362건이다. 1976~200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 소폭의 증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교통범죄는 1987년, 1997년, 2005년, 2009년에 큰 폭의 증감이 나타나는 등 48년간 가장 변화가 많았던 범죄로, 2004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



소하는 추세이다. 1976년 26,876건에서 2023년 262,691건으로 877.4% 증가했다(그림 X-2).

[그림 X-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 추이, 1976~2023



- 주:1)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을 포함함. 성폭력범죄의 경우, 1994~2001년까지는 성폭력처벌법이 특별법범죄 발생 통계에 포함되다가 이후 분류 방식이 변경되어 강력범죄(강간)에 포함됨. 2014년부터 강간에서 성폭력으로 분류명이 변경됨.
- 2) 폭력범죄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죄 등을 포함함. 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1976~2001년까지 특례법에 포함되어 집계됨.
- 3) 재산범죄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죄 등을 포함함.
- 4)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위반 범죄와 교통방해죄를 포함함. 단, 1976년부터 1992년까지는 '교통방해죄', '도로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을 포함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강력범죄에 포함되는 주요 죄명은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등이다. 주요 강력범죄 죄명별로 1976년 이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성폭력범죄만이 48년간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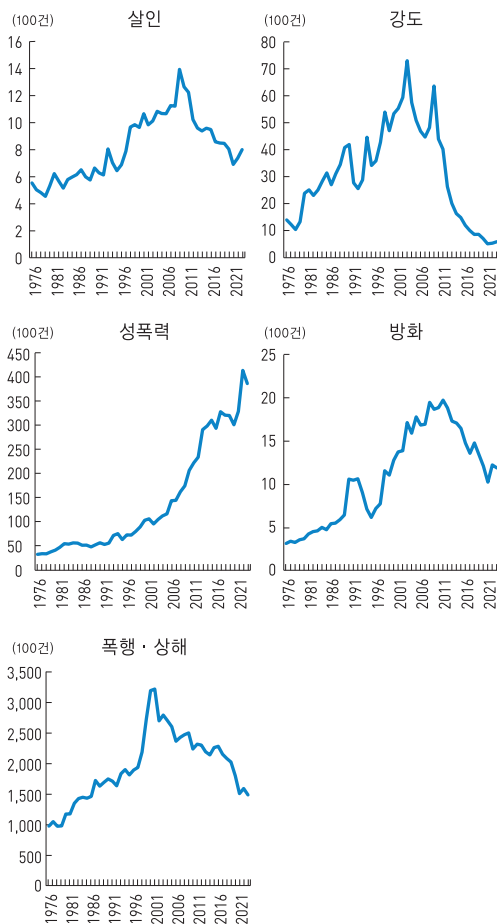
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성폭력범죄는 1976년 3,087건에서 2023년 38,698건으로 48년간 1153.6%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다른 죄명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증가가 전체 강력범죄의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가 증가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딥페이크 등) 같은 신종 성폭력범죄가 출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투운동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율이 증가하고 숨은 범죄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살인범죄와 방화범죄, 폭행·상해범죄의 경우 소폭의 증감이 반복되는 현상이 관찰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다가 특정 연도를 분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기점은 범죄에 따라 상이하여 살인범죄는 2009년, 방화범죄는 2011년, 폭행·상해는 2001년이다. 살인범죄는 1976년 556건에서 2009년 1,390건으로 150.0%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3년 801건으로 48년간 44.1% 증가하였다. 방화범죄는 1976년 318건에서 2011년 1,972건으로 520.1%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3년 1,189건으로 48년간 273.9% 증가하였다. 폭행·상해범죄는 1976년 98,542건에서 2001년 322,053건으로 226.8%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3년 149,380건으로 48년간 51.6%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른 강력범죄 죄명들이 공식 범죄 통

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6년과 비교할 때 2023년 현재 발생 건수가 증가한 반면, 강도범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는 1976년 1,380건에서 2003년 7,327건으로

[그림 X-3]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 추이, 1976~2023



주: 1) 폭행·상해는 형법범죄 중 폭행과 상해범죄 이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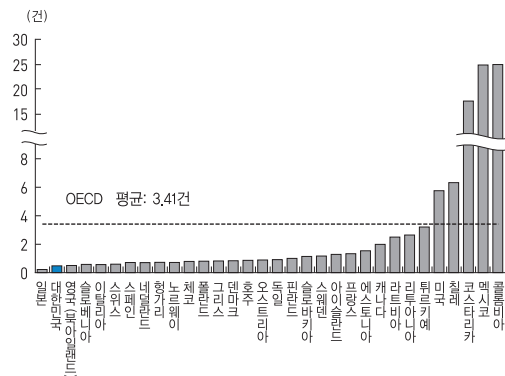
2) 1976~1992년까지 '성폭력'의 분류명은 '강간'이었음. 1994~2001년의 성폭력은 '강간' 이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을 포함함. 2014년부터 '강간'에서 '성폭력'으로 분류명이 변경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430.9%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23년 599건으로 1976년의 43.4% 수준으로 감소했다(그림 3). 강도범죄의 감소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현금 소지가 감소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방식이 변화했고, CCTV 설치 증가로 범죄 예방 효과가 향상된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

2023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평균 약 3.41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살인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약 0.48건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을 뿐 아니라, 일본(0.23건)에 이어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다. 반면 콜롬비아는 인구 10만 명

[그림 X-4]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 건수, 2023



주: 1) OECD 평균은 자료가 없는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등을 제외한 32개국의 평균임.

출처: UNODC, United Nations Crime Trends Survey,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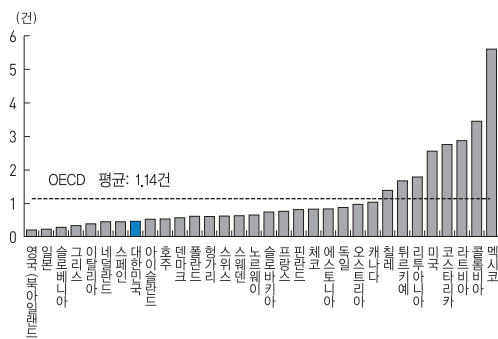
1)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 CCTV 설치 대수는 2008년 157,197대에서 2024년 1,957,790대로 12.5배 증가했다. 출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5, 최종검색일 2025.8.20.



당 약 24.91건으로 인구 대비 살인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멕시코(약 24.86건)와 코스타리카(약 17.75건), 칠레(약 6.35건), 미국(약 5.76건)이 그다음 순위로, 이들 5개국만이 OECD 평균인 약 3.41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림 X-4).

대부분 국가에서 남성 살해가 여성 살해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1.14건의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약 0.46건의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여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영국(북아일랜드), 일본 등에 이어 비교 대상 국가 중 여덟 번째로 발생률이 낮다. 다만, 전체 살인범죄 발생비 순위가 하위 두 번째인 것과 비교할 때, 남성 살해에 비하여 여성 살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그림 X-5).

[그림 X-5]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여성 살해 발생 건수,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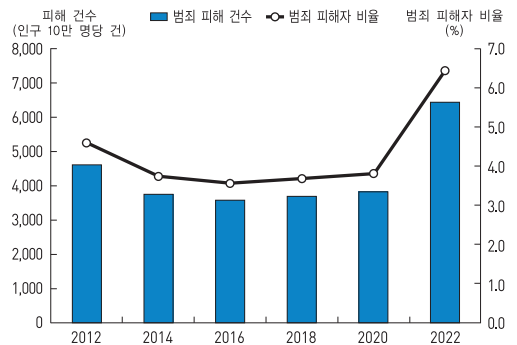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자료가 없는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등을 제외한 32개국의 평균임.
출처: UNODC, United Nations Crime Trends Survey, 2023.

범죄 피해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집계하는 공식 범죄 통계로는 신고되지 않은 범죄, 즉 ‘숨은 범죄(hidden crimes)’를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09년부터 2년마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직전 연도의 범죄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8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초기에 사용하던 조사표가 변경되어 2013년 이후 자료부터 비교할 수 있다.

총 6회의 조사 결과, 인구 10만 명당 개인 대상 범죄 피해 건수는 2012년 4,600건에서 2014년 3,743건, 2016년 3,556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3,678건, 2020년 3,806건으로 증

[그림 X-6] 개인 대상 범죄 피해 건수와 피해자 비율, 2012-2022



주: 1) 범죄 피해 건수는 만 14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력,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2) 범죄피해자 비율은 만 14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력,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가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증가 폭이 커서 6,439건에 이른다. 범죄피해자 비율 역시 유사한 추이를 보여서, 2012년 4.6%에서 2016년에 3.56%로 감소하였다가, 그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8년 3.68%, 2020년 3.81%, 2022년 6.44%이다(그림 X-6).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분석 결과, 폭행·상해, 성폭력, 강도 등과 같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범죄 피해는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755건의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2016년 302건까지 줄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서 2022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808건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폭력범죄 유형에 따라 피해 경험률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2022년을 기준으로 폭행 및

상해범죄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258건이며, 성폭력범죄는 478건, 강도범죄는 72건이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범죄 유형인 폭행 및 상해 피해 경험률은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성폭력범죄 피해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조사가 진행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강도범죄 피해 경험률은 2018년에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X-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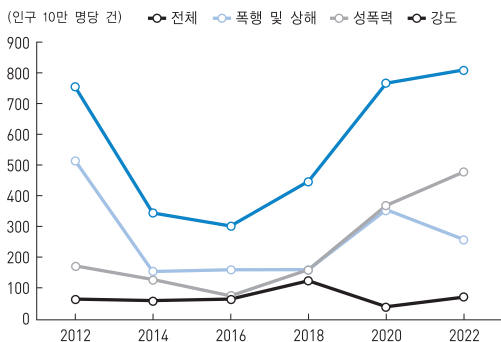
인적 사고 및 자연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외인 사망)

외인 사망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이다. 국가데이터처「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1983~2023년 41년간 전체 인구의 외인 사망률은 점차 상승하여 1992~1996년 최고점을 기록했고, 그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외인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4.4명으로 1983년의 55.9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전체 인구의 외인 사망률과 유사한 변화 양상을 나타냈다. 다만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외인 사망률이 매우 높다. 인체 외부 요인으로 사망하는 남성 사망자는 여성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남

[그림 X-7]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건수, 2012~2022



주: 1) 폭력범죄 피해 경험률은 만 14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폭행(협박 포함) 및 상해, 성폭력, 강도 등 개인 대상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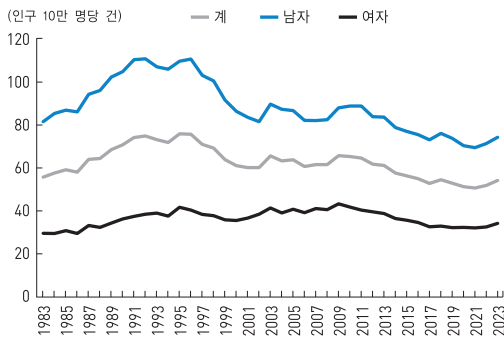
2) 전체 건수는 폭력범죄 중 괴롭힘, 스토킹을 제외한 건수임.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분석보고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본보고서.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높고 사고 위험이 큰 활동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성은 1983년에 인구 10만 명당 81.5명이 인체 외부 요인으로 사망하였고,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여 1992년에 110.5명, 1996년에 110.4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2023년 74.3명까지 감소했는데 이는 1983년과 비교하면 약 9.7%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여성은 1983년 인구 10만 명당 30.0명에서 지속해서 증가하여, 1995년에 42.0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 34.6명까지 감소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2023년 외인 사망률이 1983년보다 다소 높다(그림 X-8).

[그림 X-8] 성별 외인 사망률, 198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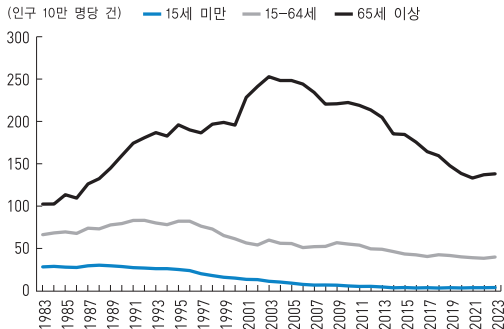


- 주: 1) 외인 사망률=인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 인구×100,000. 단, 1992년까지는 장래인구추계의 연앙인구를 소급·적용하여 산출하였고, 1993년부터는 주민등록연앙인구를 사용함.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3) 1983~2007년까지는 10년간의 지연 신고 누적분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기간은 당해 연도 신고분만 집계한 결과임.
 4) 총 사망자 수는 국내 거주 사망자 수만을 집계함.
 5) 1999년부터 사망원인이 부실하게 신고된 자료에 대해 외부 행정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시계열 비교 시 유의하기 바람.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외인 사망률은 지난 41년간 연령집단에 따라 상이한 추이를 보인다. 인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가 해당 연령집단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연령대는 65세 이상 노인이며, 15세 미만이가 가장 적다. 이 같은 차이는 외인 사망률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41년간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과 그 외 연령대 간의 간극이 점차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83년에 해당 연령 인구 10만 명당 102.6명이 인체 외부 요인으로 사망하였고, 이후 이 수치는 꾸준히 상승하여 2004년과 2005년에 248.1명까지 2.4배 증가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3년 65세 이상 외인 사망률은 138.2명으로, 1983년과 비교할 때 약 34.7% 증가했다. 반면 다른 연령집단의 경우 41년이 흐른 2023년에 1983년과 비교하여 외인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64세 인구의 외인 사망률은 1983년에 인구 10만 명당 66.6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40.3명으로 39.5% 감소했다. 15세 미만 인구는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28.7명에서 4.4명으로 무려 84.7% 줄었다. 15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인구, 특히 아동청소년의 외인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최근 20여 년간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자살, 운수사고 등 신체 외부 요인으로 사망하는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노인 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그림 X-9).

[그림 X-9] 연령별 외인 사망률, 1983~2023



주: 1) 외인 사망률=해당 연령집단 인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 ÷ 해당 연령집단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단, 1992년까지는 장래 인구추계의 연앙인구를 소급·적용하여 산출하였고, 1993년부터는 주민등록연앙인구를 사용함.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3) 1983~2007년까지 자료는 10년간의 지연 신고 누적분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기간은 당해 연도 신고분만 집계함.
 4) 총 사망자 수는 국내 거주 사망자 수만을 집계함.
 5) 1999년부터 사망원인이 부실하게 신고된 자료에 대해 외부 행정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시계열 비교 시 유의하기 바람.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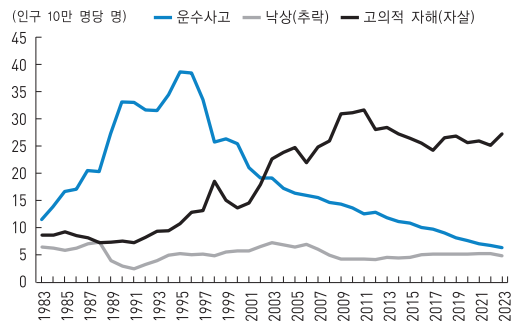
외인 사망의 요인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고의적 자해(자살),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등이다. 최근 40여 년간 주요 외인은 자살, 운수사고, 낙상(추락)이며, 이 중 가장 주된 요인은 2002년까지는 운수사고였으나, 2003년 이후에는 자살이라 할 수 있다.

자살률은 1983년 인구 10만 명당 8.7명에서 빠르게 상승하여 2011년에 31.7명으로 약 3.6배 증가해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소폭 감소해서 2023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83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3.1배 수준이다.

자살과 달리 운수사고와 낙상(추락)의 경우 감소 내지 보합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특히 운수사고 사망률은 지난 41년간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1983년 인구 10만 명당 11.5명에서 출발하여 지속해서 증가한 결과 1995년에는 38.7명으로 약 3.4배 늘어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23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6.4명이 운수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83년보다 약 44.3%나 감소한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낙상(추락)으로 인한 사망률은 1983년 인구 10만 명당 6.5명에서 1991년에는 최저점인 2.5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1992년부터

[그림 X-10] 주요 외인별 사망률, 1983~2023



주: 1) 외인 사망률=해당 연령집단 인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 ÷ 해당 연령집단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단, 1992년까지는 장래 인구추계의 연앙인구를 소급·적용하여 산출하였고, 1993년부터는 주민등록연앙인구를 사용함.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3) 1983~2007년까지 자료는 10년간의 지연 신고 누적분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기간은 당해 연도 신고분만 집계함.
 4) 총 사망자 수는 국내 거주 사망자 수만을 집계함.
 5) 1999년부터 사망원인이 부실하게 신고된 자료에 대해 외부 행정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시계열 비교 시 유의하기 바람.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터 서서히 증가해 2003년에는 최고점인 7.3명이 되었다.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9년부터는 4~5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4.9명이 낙상(추락)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1983년보다 약 24.6% 감소한 수치이다(그림 X-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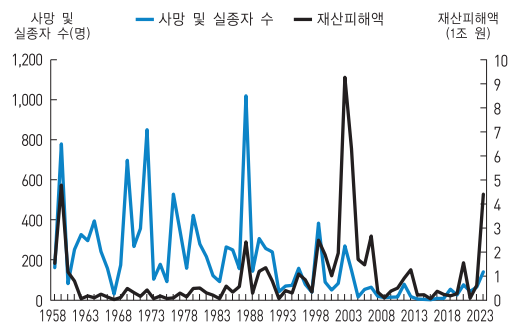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이다. 지난 66년간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했다.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모두 한반도 내륙에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다. 1959년 태풍 사라와 1969년 7~9월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대홍수, 그리고 1972년 베티, 1987년 셀마,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06년 에위니아 등 초대형 태풍은 수조 원의 재산피해와 대규모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 이를 반영한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사망 및 실종자 수가 급격히 상승한 해는 1959년(781명), 1969년(699명), 1972년(852명), 1976년(529명), 1987년(1,022명)이고, 그 외 1962년(327명), 1964년(395명), 1971년(357명), 1977년(345명), 1979년(423명), 1989년(307명), 1998년(384명), 2002년(270명) 등도 상대적으로 재해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 수가 많았다. 다만 2004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 66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2002년으로, 피해액은 약

93억 원이었다. 다음으로는 2003년 약 63억 원, 1959년 약 48억 원, 2023년 약 44억 원이었다. 재산피해액은 1962년부터 1986년까지는 인명피해 규모와 상관 없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1987년 이후부터는 재산피해 규모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대체로 인명피해 규모와 어느 정도 비례하여 증감하는 현상을 보인다. 2000년대 이후에는 재산피해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인명피해 규모는 증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2004~2022년 동안 인명피해 규모가 100명 미만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저류지 확대, 배수로 확보 및 산사태 방지 등 자연재해 대비가 강화되었고, 인명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그림 X-11).

[그림 X-11]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1958~2023



주: 1) 재산피해액은 2023년 환산 가격 기준임.
출처: 행정안전부, 「2023 재해연보」.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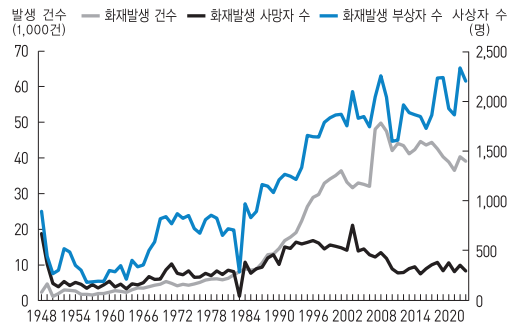
화재 발생 통계가 발표된 것은 1948년부터로, 지난 76년간 화재 발생 건수는 대폭 증가하였

다. 1948년에는 1,92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꾸준히 늘어나 1987년에 1만 건이 넘었고(10,144건) 그 이후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2007년에는 새로운 국가화재분류체계가 도입되면서 임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하여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2006년 31,778건, 2007년 47,882건). 다행히 2008년에 최고치(49,631건)를 기록한 이후에는 발생 건수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만여 건의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2020년 이후에는 소폭 증감은 있으나 대체로 3만 건대로 줄어들었다. 2023년에 발생한 화재는 38,857건으로 최초로 화재 발생 통계가 공개된 1948년과 비교하면 20.2배 증가한 셈이다.

화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 재난이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다. 지난 76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6년까지 50여 년간 증가하다가 이후 일부 예외는 있으나(2003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대체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48년 659명이었으나, 1996년 589명, 2003년 744명(최고치)까지 늘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0년 이후 200~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28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화재 초기 진압률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와 이송 및 치료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1948년

883명에서 1956년 169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일부 등락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2,248명, 이어 2022년에는 2,327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2023년에는 2,194명이 화재로 인해 부상하였는데 화재 통계가 처음 공개된 1948년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한 셈이다(그림 X-12).

[그림 X-12] 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1948~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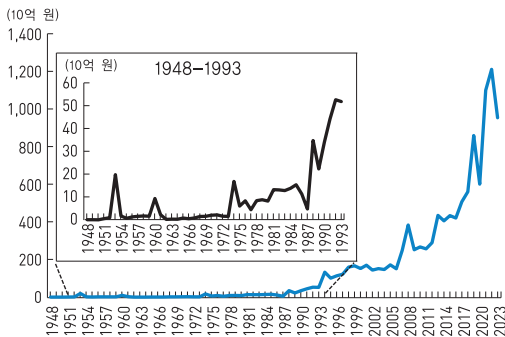
주: 1) 2007년부터 임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 통계에 포함됨.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각 연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지난 76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1948~1993년까지는 소폭의 증감 현상만 나타났지만(1953년, 1960년, 1974년, 1988년, 1992년 증가함), 1994년부터는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1948년에는 화재로 인하여 8,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1994년에는 그 액수가 약 1,32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22년 피해액은 지난 76년간 최고치인 약 1조 2,104억 원에 이른다. 2023년 피해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약 9,530억 원인데,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처음 공개된 1948년과 비교하면 무려 약 10,830배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재산피해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되고 건축물의 재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그림 X-13).

[그림 X-13]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1948-2023



주: 1) 2007년부터 인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 통계에 포함됨.
2)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명목 수치임.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각 연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관련 통계는 1978년부터 공개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78년 9만 6,890건에서 2000년 29만 1,760건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2023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만 1,470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78년 대비 약 2.1배 증가한 수치이다. 발생 건수와 유사하게 부상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특정 연도(2000년 427,410명)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3년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84,250명으로 1978년 93,040명과 비교할 때 약 3.1배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사망자 수 역시 특정 시기(1991년 14,190건)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일부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차이점은 발생 건수나 부상자 수에 비하여 사망자 수의 감소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사망자는 2,670명으로 1978년 사망자 수 6,070명 대비 약 56.0%나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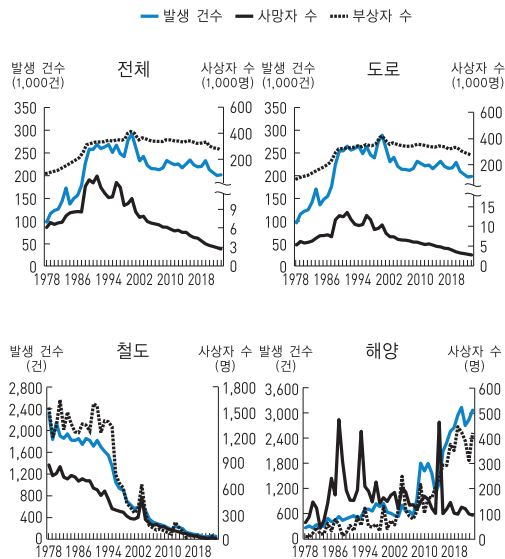
지난 46년간 교통사고 발생 추이는 도로, 철도, 해양 등 교통수단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추이 역시 전체 교통사고와 매우 유사하다. 도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78년 94,320건에서 2023년 198,300건으로 늘어났다(최고치 2000년 290,480건). 부상자 수는 같은 기간 91,460명에서 283,800명으로 증가했다(최고치 2000년 426,980명). 이와 달리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5,110명에서 2,550명으로 감소했다(최고치 1991년 13,430명). 도로 교통사고는 발생 건수나 사상자 수 모두 2000년대 이후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민식이법’ 추진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철도 교통사고는 발생 건수, 부상자 수, 사망자 수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발생 건수는 1978년 2,300건에서 2023년 68건으로 줄

었고,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878명에서 19명, 부상자 수는 같은 기간 1,550명에서 16명으로 감소했다.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사고는 사상사고가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특히 서울은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된 2010년부터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자살이나 안전사고 등 사상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양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건수와 부상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발생건수는 1978년 261건에서 2023년 3,092건으로, 부상자 수는 9명에서 424명으로 증가했다. 이

[그림 X-14]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1978-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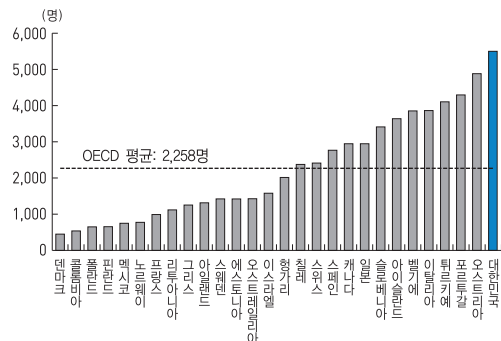
주: 1) 전체 교통사고 통계의 경우, 2006년까지는 지하철 사고와 항공사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는 지하철 사고를 제외한 통계를 포함하고 있음.

2) 2008년 이후부터 해양사고 통계에 해양경찰청의 조난사고를 반영함.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각 연도.

와 달리 사망자 수는 일정한 변화 추이를 보이 기보다는 1987년 477명, 1993년 430명, 2014년 467명 등 특정 연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데,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대표적인 예이다(그림 X-14).

OECD 국가에서는 2023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평균 2,258명이 도로 교통사고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22년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5,505명으로 비교 대상 28개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의 약 2.4배이다. 우리나라에 이어 오스트리아(4,883명), 포르투갈(4,289명) 이 인구 대비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수가 많다. 반면 덴마크(약 440명), 콜롬비아(약 530명), 폴란드(약 641명), 핀란드(약 650명) 등의 국가는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그림 X-15).

[그림 X-15] OECD 국가의 인구 100만 명당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수, 2023



주: 1) OECD 평균은 자료가 없는 체코,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영국, 미국을 제외한 28개국의 평균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4,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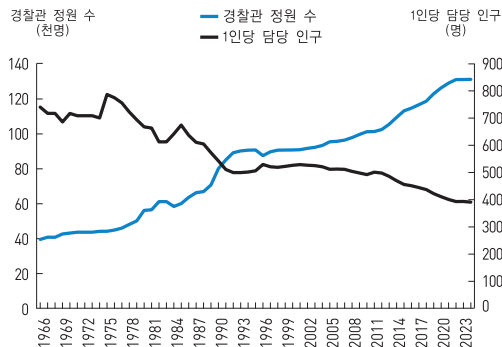


경찰력 및 소방력

경찰관과 소방관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경찰력과 소방력을 나타내는 요소이자, 지역사회 안전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966년부터 비교할 수 있는데, 지난 59년간 경찰관 정원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빠르게 감소하였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1966년 741명에서 2024년 391명으로 47.2% 감소했다(그림 X-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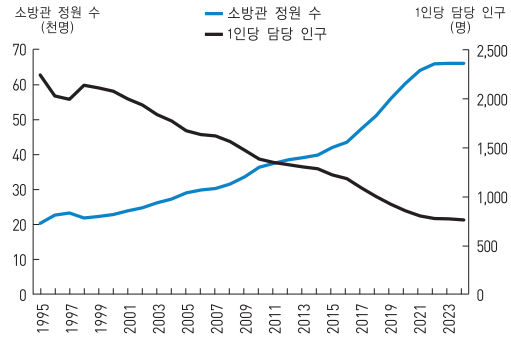
한편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995년부터 비교할 수 있다. 경찰력과 마찬가지로 지난 30년간 소방관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감소했는데, 다만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더 크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같은 기간 2,225명에서 766명으로 65.6% 감소했다(그림 X-17).

[그림 X-16] 경찰관 수, 1966-2024



주: 1) 1966~1991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총인구÷경찰관 정원 수.
2) 1992~2024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주민등록인구÷경찰관 정원 수.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X-17] 소방관 수, 199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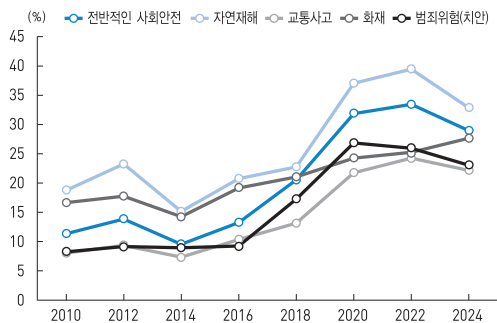
주: 1)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 ~2023년: 전국 총인구수 ÷ 시도 담당 소방 공무원 총 정원 수, 2024년: 전국 총인구수 ÷ 전국 소방공무원 총 정원 수.
2) 소방관 정원 수가 연도별로 분류 차이가 있음.
출처: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각 연도; 「(구)소방방재 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각 연도.

안전에 대한 인식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 결과, 일반 국민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가장 최근 조사인 2024년에는 그 비율이 감소하여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4년 9.5% 이후 2022년 33.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28.9%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추이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범죄위험 영역 모두에서 나타난다. 다만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은 2024년에도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조사 시점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14년의 경우,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위험 등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이후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X-18).

[그림 X-18]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10-2024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 대상자(만 13세 이상) 중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10년 사회조사부터 전반적 사회안전,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위험의 5개 항목을 모두 조사하기 시작하여 이전 연도 자료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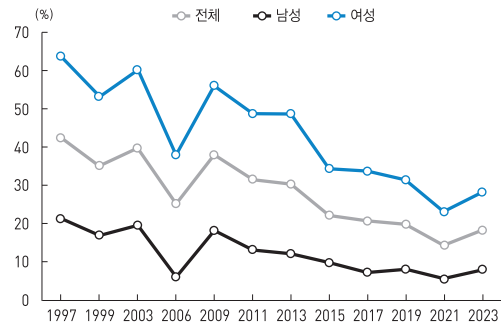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역시 감소했다. 「전국범죄피해조사」 분석 결과,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997년에 42.4%, 2009년에는 37.9%에 이르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3년에는 18.2%로 떨어졌다. 지난 27여 년간 소폭의 등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

움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유사한 변화 추이가 관찰된다. 다만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아서, 1997년에는 남성의 21.3%, 여성의 63.7%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2023년에는 그 비율이 남성 8.0%, 여성 28.1%로 줄었다(그림 X-19).

[그림 X-19]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1997-2023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 대상자(만 14세 이상)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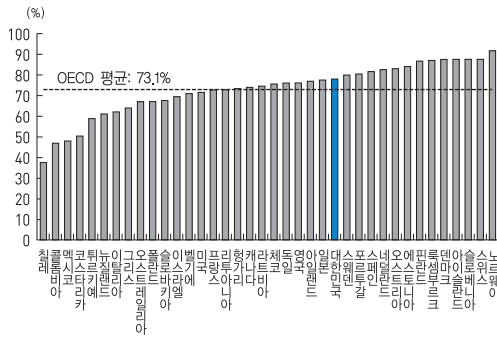
2) 2013년부터 표준화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임.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1997-2006; 「전국범죄피해조사」, 2009-2023.

OECD의 How's life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9.5%로 OECD 평균(74.9%)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노르웨이(92.0%), 슬로베니아(90.6%), 룩셈부르크(88.3%)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칠레(37.1%), 콜롬비아(44.8%), 멕시코(46.6%) 등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그림 X-20).



[그림 X-20] OECD 국가의 야간보행안전도, 2023



주: 1) 야간보행안전도는 각국 조사 대상자(15세 이상) 중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2024: Well-being and Resilience in Times of Crisis*, 2024.

맺음말

1976년부터 33년간 범죄 발생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교통범죄 등 특별범죄의 증가이고, 2009년 이후 전체 범죄 발생의 감소를 이끈 원동력 역시 교통범죄의 감소였다. 다만, 2002년 이후에는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를 중

심으로 형법범죄가 증가하면서 전체 범죄 발생의 감소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성폭력, 사기 등의 억제 및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외인 사망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노인의 외인 사망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매우 높고, 그 차이가 점차 벌어지는 상황이므로, 특히 노인 자살 등 외인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1990년대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던 범죄와 외인 사망, 교통사고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화재, 자연재해, 교통사고의 경우 저류지 확대, 배수로 확보, 교통안전 문화 확산 등 사회안전망 강화의 결과 2000년대 이후 인명피해 규모가 감소하였다. 또한 국민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